

민주당, '오빠' 이어 '뽀뽀' 추태 논란... 국민의힘 "기괴한 정치문화"

우형찬 "경솔한 언행"... 정원오도 "책임" 사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오빠 추태'에 이어 '뽀뽀 추태' 논란으로 '상인지 갑수성' 비판에 직면한 모습이다. 특히 막판 선거전에 관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곤혹스러움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1일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우형찬 당선취청장 후보의 동반행동이 있었으나 현장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대처했다"며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겠다"는 데 관심이 쏠렸다고 말했다.

논란은 전날 유세도 후보와 함께 목동 청양 유세를 진행하던 중 우형찬 후보가 품에 안은 지지자의 아이를 향해 "뽀뽀 한 번" 등

으로 발언하고 입세는 선일 부대변인이 이를 제지하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이로 인해 앞서 부산 구포시장 유세에서 초동생 유아에게 '오빠'라고 해보라'던 정청태 대표 발언까지 재조명되기에 이를 컷했다.

우형찬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기괴한 정치문화에 국민은 불쾌함을 넘어 소름이 끼친다"며 우 후보와 정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엔 뽀뽀를 강요하는 기괴한 정원오의 유세"라며 "오빠 강요에 이어 이번엔 유세 현장에서 뽀뽀

강요까지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우 후보는 곧바로 "미움의 상처와 불편함을 겪으신 아기와 부모님께 사과드립니다"고 고개를 숙였다.

우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주의하고 경솔한 언행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춘다면서 장차 어른들의 입법적인 시각으로 아이를 대했던 제 불찰"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야 한다"며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절박한 자세로 주민들을 만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민 기자 joy@sminilbo.co.kr



대구 유세 유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경 대구시장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1일 대구 아미바단지의 반야일시장에서 각각 유세하고 있다. /연협뉴스

민주당·국민의힘, 한화 폭발사고에 조용한 선거운동

로고송 사용·울동 금지 지지

여야 정치권이 한화에너지에 이스 대전공장 폭발사고가 발생한 1일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조용한 선거 운동'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청태 대표는 대전 한화에너지에 이스 사고와 관련해 전국 민주당 후보와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울동 금지는 물론 전국 모든 후보들에게 유세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후보 지각 유세를 위해 충북 괴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도, 또한 국가의 책무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는 일이 제의 덕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파와 싸우고 있는 안에 개인 신분,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분께서 큰 피해가 없기를 기도해주시고 화파와 싸우고 있는 소방당국 관계자들을 위해

안전을 빌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사고와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 인정을 최우선에 두고 수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 전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한화에너지에 이스 공장 사고가 발생했다"며 "수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고 했다.

이이 "무엇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명 구조와 조속한 진화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와 대정시, 유성구 등 관계부처에서도 총력을 다해 사태에 대응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의 확보, 사고의 원활한 수습과 진화 파란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도 언론 공지를 통해 "장동혁 위원장은 이 사고와 관련해 전국의 국민의힘 후보와 선거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울동을 자제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관계 당국이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장동혁 위원장은 이날 지일 유세를 위해 제주를 찾았다가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 소식을 들은 뒤 오후 예정했던 제주와 울산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로 이동했다.

국민의힘은 "대전 사고와 관련해 급일 예정했던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한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폭발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당한 분들의 조속한 치유를 기원한다"며 "정부는 조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전영록 기자 dra@sminilbo.co.kr

"당선맨 '정청태 사퇴' 상식... 8월 8일 전라도 지도부 바꾸고 복당"

김관영, '鄭 퇴진' 재확인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가 1일 "제가 당선되면 정청태 대표가 사퇴해야 맞다고 보는 모드가 아니라 사퇴하지 않으면 모드가 없다"며 "복당하면 정 대표 퇴진에 앞장설다"는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당선되면 즉시가 아닌, 9월 더불어민주당 부당함을 인정해서 '정청태 사퇴'가 아니라 '정 대표 퇴진'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대에서 지도부가 바뀌어도 노력할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복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부 사정투표일이 전국 최고치(광주·전남은 통합해 추산)를 기록한 데 대해서도 "기권하려고 그

랬는데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투표장에 나가겠다"는 얘기를 할 맘이 들었다"며 "지질 판단하겠다는 민심이 굉장히 커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보고"고 말했다.

앞서 정청태 대표가 '민주당이 정청태에서 무너지면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하다'고 우려한 데 대해서도 "선거장에 편 가르키고 민주당 사람들을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어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굉장히 절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당대에서 지도부가 바뀌어도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정 대표 퇴진'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대에서 지도부가 바뀌어도 노력할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복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부 사정투표일이 전국 최고치(광주·전남은 통합해 추산)를 기록한 데 대해서도 "기권하려고 그

이런 곳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 대표 개인입장에서는 잘못한 공천에 대한 공천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복 심기가 본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도민들의 민심을 꺾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는 최근 조세락 사무총장이 '김 후보가 당선포도 (전북은)재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원택 (민주당)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타 코디"면서 "이 후보는 정청태, 자기 돈도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식사비를 대담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 범포인이기 때문에 선거 출마하기 전에 (사법리

스크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며 "법이 사람들의 일반 상식과 도덕을 뛰어넘지 못한다. 판사들도 검사들도 이 부분은 충분히 판단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이 대통령과의 출마 사전 교감서에 대해 "나중에 생각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에서 계속 이걸 정치 정점화 해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고 남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 나섰던 김 후보는 '대리비 대담' 의혹으로 전격 제명됐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는 술자리에 동석한 지역 청년들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했다가 부당함을 느껴 다음날 회수했다고 해명했지만 당 지도부는 기존의 결정을 강행처리했다.

이영민 기자 joy@sminilbo.co.kr

"국민의힘 일꾼 선택해야 '국민 무시' 민주당 콧대 꺾어"

송언석, 투표 참여 호소

"대통령말이 댐 후보들 집권여당 오만한 민낯"

국민의힘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6.3 지방선거와 관련, "유능하고 준비된 국민의 힘 일꾼들을 선택해야 오만한 민낯과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민주당의 콧대를 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대국민 호소식' 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통령말이 하나 믿고 준비도 되지 않은 무능한 후보들을 내보낸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집권여당의 오만한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은 바닷 앞의 돌멩이다. 집 있는 사람은 새금쪽, 집 없는 사람은 뿔개, 양말 장난은 이자만, 기어올라가는 사람은 파업족, 장사하는 사람은 고금리족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선거에 조금

이라도 약하게 될 만한 것들은 죄다 선거 뒤로 미루고 있고 짧고 굵은 유가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우리 민생경제에는 '새금쪽민'이라는 제목의 청구서가 날아올 예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의 후보 현명함을 언급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런 사람들이 맡겨도 되겠다"라며 "유출소에서 여중생의 외박강요의 후, 간판 외출금, 아기사레국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해명하나 제대로 못하고 토론회를 회피하고 재대립하면서 사정투표 전날 밤에 야간 기습 토론 한번 하는 '남침'하고 무능한 후보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다"라고 꼬집었다.

또 정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부산발전특별법에 대한 입장이 하루 아침에 180도 선화하는 '소신없는 후보'에 대해 국민의 미래를 맡기셨"이라고 했고,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에 대해 "복소스 22천 사람이 외할아버지하고 부르며 외손을 자

처해 온 '독립운동가 후손 사칭' 범'에게 인천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권력을 동원해 한 사람의 범죄를 없애는 공소취소를 시도하고 SNS에 화포를 쏘어서 관세청장은 돈을 조지하고 누군구의 아버지 자 누군구의 아들인 투표관리관을 거만한 난발과 손가락으로 까먹아 딱 부르는 권위주의적 태도, 이것이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에 투표로 경고해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 바로 지상 경고를 내주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은 바로 공소취소 특권을 잃어버릴 것이"고, 정청태 민주당은 국회 18개 상임위를 독식하며 외의 독재를 이어갈 것"이라며 "대법원은 내년 6월 조태래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이 정권엔 완전히 장막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바람 앞에 놓인 대한민국은 내내 지켜주어야 한다. 오만한 권력에 치욕적인 견제는 해부해야 한다"며 "넌의 힘을 주체하지 않고 '복소스' 민생의 맛에 도취한 집권 세력에게 제이 버튼 한 번 눌러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박찬대 후보의 '독립운동가 사칭 논란'과 정원오 후보의 '토론 회피 의혹'을 겨냥한 입법을 예고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가 끝난 뒤에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박찬대 22천 사람 사기 범법과 정원오 방치죄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찬대 사기 범법 3억"은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독립운동가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선 선거 후보자의 등록시 등록금 현수서와 관련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공직자 윤리법과 독립운동가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직자들이 현원관계를 조직하지 못하게 하고 조작성 처벌방도를 늘리는 내용도 담는다.

송위 "정원오 방치죄"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시·도지사 후보의 등록금에 조세 3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구상이다.

전영록 기자 dra@sminilbo.co.kr

민주당, '60시간 상황실 비상가동체제' 전환

"선거 마지막순간까지 철실하게 임해야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1일 6.3 지방선거 투표일까지 '상황실 비상가동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총괄선대본부장실 발령의 공지를 통해 "6월 1일 오전 6시를 기해 지방선거 투표가 종료되는 3일 18시까지 '60시간 상황실 비상가동체제'로 전환했다"고 했다.

이후 "투표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철실하게 임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며 "전당적자는 가동

태세를 갖추고 선거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국무체적으로 비상가동체제에 따라 민주당 모든 정당·사무직 당직자는 투표 마감시까지 즉시 소동 체제를 유지한다.

상시 상황 점검 및 보고, 집행 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전국 현장 조직과 직, 언론, 온라인전문, 후보자 등선, 메시지 등의 철저한 상황 파악을 지시했다.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보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책임자 승진시 즉각 이영이 가

능한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긴급 상황으로 판단될 때는 현장에서 즉시 선조치한 후 보고하도록 했다.

지지중 결집을 위한 투표 참여 독려도 당부했다.

이번 지일, 특히 집전지 연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평화보 등을 이용해 메신저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투표 독려도 지시했다.

전영록 기자 dra@sminilbo.co.kr

與 의원들 "성과 만들어낼 사람"... '평택을 김용남 지지' 호소

"李정부 국정 동력 뒷받침"

새로운 예도 중요한 선거"

6.3 지방선거 분위표를 이끌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경기 평택을 방문, 민주당 김용남 국회의원의 재선거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민주당 윤종근·이건태·이재경·김남희·송옥주·홍기문·김현정 등 민주당 김용남 후보 지원 국회의원단은 이날 김 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을 재선거는 단순히 국회의원 권한을 펼치는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고 평택의 새로운 도약을 앞당길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또 "평택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

업의 핵심 거점이자 광택원을 품은 세계 물류의 관문이며 주민이 국가적 위기에 헌신하며 전략적 거점"이라며 "김 후보의 약속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이 "이런 평택에는 말 뿐인 정치인이 아니라 실제 성과를 만들어낼 사람이 필요하다"며 "중앙 정부와 국회, 경기도와 평택시를 연결해 지역 현안을 풀어나갈 사람이 바로 김 후보"라고 말했다.

또한 "KTIX와 GTX, 도로망 확충 등 주요 사업은 국회의원의 헌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평택의 경기도, 중앙정부가 함께 움직여야 하고 새로운 인적 지역 국회의원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 안성, 용인은

물론, 충남까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 후보 손을 잡고 함께 뛰겠다"라며 "김 후보의 약속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원단은 "지금 평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주민이 경기도지사, 최원광 평택시장과 함께 일할 민주당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하고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라고 밝혔다.

이이 "김 후보는 평택 발전을 위해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이번 선거의 선봉으로 평택 미래를 달라질 것"이라며 "평택 미래를 위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민주당 김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전영록 기자 dra@sminilbo.co.kr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탈세 이전 안돼... 망국적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불합 투기 탈세 이전 안 된다"고 불명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GTX 개정에 '최대 40억 포상금에 신고 폭주... 부동산 탈세 10천억 8천 수조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들의 소속 조국혁신당 차기국 의원이 국회청문회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11월 신고금액이 10조 원에 달하는 3월 말까지 접수된 부동산 탈세 자료는 총 780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제도상 제보자가 중요 증빙자료를 제공해 5000만 이상의 세금이 추정되면 탈루 세액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 상한은 최대 40억이다.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를 분석해 지역 출세 조사와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복소스 부동산 이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검증도 강화하고

있다.

차기국 의원은 "신고센터 제보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은 수도권 부동산 탈세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이 그만큼 커지는 의미"라며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증해 실제 추정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록 기자 dra@sminilbo.co.kr